기업환경개선 추진 계획

중기 R&D 지원 확대…1백억대 펀드 조성

■ 중소·벤처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분야에서의 기업환경개선은 대외 여건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그동안 대기업에 비해 취약하다고 지적됐던 연구개발(R&D) 능력을 높이는 데 지원의 초점이 맞춰졌다.

그 일환으로 중소기업청의 R&D 예산을 올해 4천300억원에서 내년에 4천800억원으로 13% 올린 것.

특히 단순히 R&D 자금을 지원하기보다는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체계화된 기술개발 프로세스에 맞춰 기능과 품질, 가격 등이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품설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기술개발→사업화'의 각 단계마다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면서 각 단계에서 성공을 거둔 중소기업은 자동으로 다음 단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완결형 맞춤 R&D 지원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존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민관 공동 R&D 협력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자신이 원하는 기술을 개발해달라는 조건으로 기금을 내면 정부가 대기업의 2배의 기금을 보태 펀드를 조성해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한 것.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 '1인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영, 법률 및 세무 등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고 공동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1인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디자인 출원·등록료 감면 30→70%로 늘려

국내 'U턴 기업' 임대산단 입주시 우선 순위

■ 중기 디자인 분야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디자인개발 지원과 금융 지원 등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디자인 관련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중기업의 디자인 출원료와 최초 3년분 설정등록료 감면 폭을 50%에서 70%까지 늘린다.

또 디자인 전문가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활용하는 '디자인 경영 컨설팅' 지원제도는 올해 30여개 기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업체당 지원규모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출보험공사, 플랜트산업협회 등과 공동으로 중소 플랜트 전용 수출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U턴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청의 '사업전환 융자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임대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 우선순위를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한·일 부품소재 전용공단 부지를 지정하고 조성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중견무역상사 지정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8월부터 투자를 시작한 탄소펀드의 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산품 생산의 공정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저탄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탄소라벨링' 제도를 12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대기업 위성방송 소유 제한 폐지

■ 방송산업 분야

내년 말까지 방송산업에 대한 진입·소유·영업 등과 관련한 규제가 대거 완화된다.

정부는 발표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진입부터 영업까지 엄격한 규제가 적용돼왔던 방송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유발되고 활발한 인수합병을 통한 덩치 키우기가 가능해져 국내 미디어 기업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공성 등 방송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산업적인 논리에 경도됐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1월까지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3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겸영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연내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겸영 범위를 전체 PP매출의 33%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방송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위성DMB를 포함한 위성방송에 대한 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고 지상파DMB(KBS·MBC·SBS 계열 제외) 사업에 대한 대기업이 지분 소유한도를 49%로 확대한다.

신문 등의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 역시 33%에서 49%로 완화하고, 외국인의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을 33%에서 49%로 늘린다. 이를 위해 연내에 방송법을 개정한다.

로펌 설립 규제 완화…'전자 공증제' 도입

■ 법률 분야

법률 부문의 핵심은 로펌(법무법인)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선 정부는 법률사무소가 사업을 쉽게 확장할 수 있도록 분사무소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변호사법 시행령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로펌은 주사무소와 같은 시·군·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고,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주사무소에 구성원의 과반수가 상주하도록 규정된 주사무소 주재 요건도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법률사무소가 법률정보 제공 등 부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독립 법인을 간편히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도 완화된다.

즉, 지금까지는 타법인에 대한 출자가 일률적으로 자기자본의 25% 이하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자기자본이 5억원 이하인 경우는 자기자본의 25% 이하, 자기자본이 5억원 이상일 경우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이하까지 출자가 허용된다.

정부는 또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법인을 설립할 때 공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를 설립할 때는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의무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시내·이동전화·인터넷 영역구분 없애

이동통신·무선 인터넷 개방 접근 쉽게

■ 정보통신 분야

정보통신 분야의 기업환경개선은 통신사업자 허가 및 겸업 금지 조항의 철폐가 핵심이다.

그동안 정부는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공급 등을 이유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기간통신사업도 시내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접속 등으로 복잡하게 칸막이를 해놓았던 것이 현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칸막이식 규제가 없어진다. 방통위는 올 연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복잡하게 얽힌 칸막이식 역무구분을 없애고 기간통신사업 허가만 받으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 승인 절차도 폐지하되 다만 KT나 SK텔레콤과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전이의 방지를 위한 보완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이나 유선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통신부품, 장비 개발 등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용약관에 대한 규제도 개선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요금 등의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무선통신과 달리 신규진입이 자유로운 유선통신사업자에게는 출연금 부담을 경감해줄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와는 별도로 올 연말까지 IPTV의 특성,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IPTV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커피 전문점서도 음반 판매…콘텐츠 유통구조 고도화

■ 콘텐츠산업 분야

내년부터는 스타벅스 같은 커피 전문점에서도 음악CD를 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확정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은 콘텐츠 산업의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후진적인 콘텐츠 유통구조와 관행을 대거 선진화하는 대책을 담고 있다.

특히 커피 전문점에 대해 음악 CD나 음악 영상물, 음원 등의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식품위생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커피음식점 등 휴게음식점에 대해 독립된 건물이나 분리된 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음악CD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방송영상, 모바일 콘텐츠 등 독과점 구조가 형성된 분야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방송 외주제작을 둘러싼 후진적인 관행도 선진화할 방침이다.

모바일 분야와 관련해서는, 콘텐츠 제작사가 독자적으로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모바일 웹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자체 포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